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처리 추진… 국힘 총력 저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유지 등 핵심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국힘 “법치주의 훼손 법안” 반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이번주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안의 세 가지 틀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의 유지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상호 견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노인 학대, 아동 학대)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주말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초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성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이번주 초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법안소위를 보이콧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과반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위원장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을 마땅히 견제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형소법 개정 반대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지만, 당 내 강경파와 강성당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더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정 장관이 사퇴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한다”면서 “소신도, 책임도 없

는 장관의 비겁한 행태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나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막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위와 TF 등을 구성해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형소법 개정안 반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을 놓고 후보 추천과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추가로 협의에 나선다. 특검 추천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 중 한 쪽이 거부하면 특검 추천이 어려운 구조다. 또한, 수사 범위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 서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이 시작된 후 맞는 첫 주말인 26일,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각각 전남, 울산, 전북을 찾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민주 당권주자들 “李 지킬 책임자는 나”

‘이재명 수호’ 전면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이 시작된 후 맞는 첫 주말인 26일,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기호순)가 각각 전남, 울산,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사람은 자신이라고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전날(25일) 광주전남통합특별시를 찾은데 이어 26일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초청강연회를 진행했다. 정청래 후보는 주말 동안 양산, 김해, 창원, 진주, 거제, 울산 대구 등지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소화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완주,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등을 찾아 당심에 호소했다. 이 중 완주와 진안에선 2030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민석 후보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본선에 진출한 박선원·임미애·김용·서미화 후보와 인사했다. 김 후보는 강연에서 “민주당이 반명(반이재명) 후보를 최고위원에 3명이나 당선시킬 당인가”라며 “선거 중반에 판세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친명계)대 1(친정청래계) 판세에서 결국엔 5대0으로 구성되는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에서 떠났던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이 통합을 원하는지, 합당을 원하는지 알아보겠다. 애매모호하게 합당을 선언해서 당을 엉망으로 만드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후보와 함께 울산을 찾았다. 정 후보는 당원 간담회에서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자신을 압박하는 구도로 짜여진 것을 두고 “짜임도 1대1이었으면 좋겠다. 2대1, 3대1로 하려니까 제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날 젠스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엔비디아의 5000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특히 이 대통령께서 현대차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 전북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신 것은 전북의 미래산업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주신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전국 집회 종료… 장외 행보는 지속

참정권 수호집회 대구 끝으로 마무리 국힘 “공식 일정 아닌 자율적 행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대구를 끝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 순회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올림피아공원에는 계속 방문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2일), 전남·광주(16일), 경기도 용인(23일) 등을 차례로 찾아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시민운동 현장 방문은 대구 방문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예고한 일정대로 지난 23일 경기 용인 수지구, 25일 경남 김해와 대구를 찾아 전국 집회 참석을 마무리했다.

대구 집회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 결의대회’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김상훈·강대식·김승수·이인선·이달희·최은석·구자근·이진숙 의원 등 대구 지역 현역 의원과 김재원·김민수·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김민전·박대출·박준태·서천호 등 일부 의원도 얼굴을 비쳤다. 앞서 열린 김해 집회에 동행한 현역 의원은 없었다.

26일 장대표는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해·대구에 수많은 청년과 시민이 모였다”며 “무더위에도 거리에 나서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다”며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 일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 광장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장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주장이 오히려 음모론이었음이 입증됐다”며 “이제 국민이 누가 옳고 틀렸는지 진실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앗김 참정권을 되찾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국민의 함성은 멈추지 않는다”며 “절절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순회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장 대표의 장외 행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피아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 집회에 개인적으로 방문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역시 정치인이 시민들이 모인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림피아공원에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참정권을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정치인들은 일말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시민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훗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외면한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의 올림피아공원 방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올림피아공원에 나간 사람이 전부 강성 지지자는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은 결국 강성 지지층이기에 올림피아공원에 가면 강성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장 대표의 올림피아공원 방문 빈도 변화에 관한 질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사건이 밝혀져 더 자주 방문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보기에 (선관위)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에 더 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았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